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도심 광장에서 도시독서 페스티벌 개최	베를린
산업·경제	3	중소기업을 위한 동산·채권 담보 대출제도 시행	도쿄
사회·복지	4	시간은행(Time Banking) 자원봉사제도 확대 시행	뉴사우스웨일즈
행정·교육	7	친환경 학교 교육 지원사업 확대 시행	빅토리아
	10	신임 민헨시장 취임사	민헨
환경·안전	16	도시의 안전문제 논의 공간, 인터넷 커뮤니티 오픈	뉴욕
도시계획·주택	17	표준화된 개발 부담금 제도 도입	빅토리아
	20	저렴주택 공급 전략계획, “Housing New York” 발표	뉴욕
	23	참여형 공동주택 사업 공모	파리



도심 광장에서 도시독서 페스티벌 개최

베를린市 등 / 문화·관광

- 베를린市의 중심도로인 프리드리히街에 위치한 베벨광장에서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도시 순회 문화행사인 도시독서(StadtLesen)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음.
- 오스트리아 유네스코위원회와 독일 유네스코위원회의 후원 하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독서(StadtLesen) 페스티벌은 도심 한복판의 광장을 독서공간으로 꾸미고, 시민들이 책을 읽도록 유도함으로써 점점 줄고 있는 독서 인구를 넓혀보자는 취지의 문화예술 프로젝트임. 이 페스티벌은 2009년에 발족하여 현재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의 40여 개의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으며, 이미 유럽에서는 주요 도시문화행사로 평가받고 있음.
 - 이 페스티벌은 야외에서 독서가 가능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됨. 행사가 열리는 도시의 광장에는 약 3천에서 5천권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꽃힌 서가가 설치되고, 안락한 독서를 위해 의자 대신 빈백(beanbag)소파와 해먹(hammock)그네가 배치됨. 작가들을 초청해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코너도 설치됨. 한낮의 강한 햇빛과 저녁의 쌀쌀한 기온변화를 감안하여 파라솔과 따뜻한 덮개 등도 비치됨.
 - 도시독서는 이벤트성 문화행사가 아님. 시민들이 도심광장에 설치된 서가에서 자유롭게 책을 뽑은 후 편하게 자리를 잡고 자기만의 독서삼매경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사임. 여기서 광장은 독서를 위한 간단한 비품 설치만으로도 편안한 책읽기의 공간으로 변모됨. 시민들은 도서관과 같은 실내만이 아니라 야외공기 속에서 장시간 책 읽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며, 도심광장을 산책 장소로만이 아니라 바닥에 엎드리거나 누워서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색다른 공간으로 체험할 수 있음.
 - 행사는 시민들이 도심광장에 많이 모이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매일 9시부터 일몰 시간까지 진행됨. 일요일은 주로 가족독서의 날로 어

린이와 청소년, 그 부모들이 함께 광장에 나와 책을 고르고 읽는 날로 꾸밈. 금요일은 각 도시별로 특색 있는 테마 행사로 꾸며짐.



- 베를린시는 올해 도시독서 페스티벌의 특별테마를 ‘통합’으로 정함. 페스티벌이 열리는 베벨광장은 사실 1933년 5월에 나치가 비판적인 작가들과 유대인들의 책을 불사른 장소임. 市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금요일에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이주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의 언어로 된 책을 소개하는 등 시민들이 다양한 민족들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로 삼는 통합의 행사로 꾸밈.
- 2014년 도시독서 페스티벌은 4월말의 뮌헨에서의 첫 행사를 필두로 이번 베를린 행사를 거쳐 7월까지 독일의 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8월부터 10월까지의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도시들에서 개최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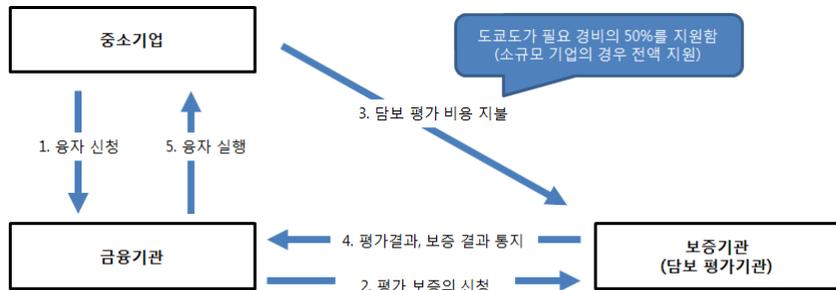
<http://www.berlin.de/ba-mitte/aktuell/presse/archiv/20140430.1010.396804.html>
<http://www.gratis-in-berlin.de/festivals/item/2009643-stadtlesen-open-air-lesewohzimmer-bebelplatz>
<http://www.stadtlesen.com/index.php>

산업·경제

중소기업을 위한 동산·채권 담보 대출제도 시행

도쿄도 / 산업·경제

- 도쿄도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도쿄도 동산·채권 담보 대출(ABL) 제도”를 5월 1일부터 실시함. 본 제도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은 부동산 담보에 관계없이, 차량, 건설 기계, 공작 기계, 매출 채권, 재고 등 다양한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사업 자금의 차입이 가능하게 됨.
- 담보의 종류마다 지정된 ‘전문 기관’이 동산 및 채권의 평가 등을 실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받게 해줌. 도쿄도는 자금의 차입 시 담보 평가 비용 및 보증료 등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함.



관련기관의 역할과 제도의 프로세스

- 도쿄도는 대출 금액의 4%(매출 채권, 재고의 경우 3.5%)를 상한으로 담보 평가 비용, 보증료 등의 50%를 보조하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전액을 보조함.
- 최대 대출액은 2억 5천만 엔(약 25억 원)으로 기계 설비를 담보로 할 경우 7년 이내, 재고담보의 경우 1년 이내의 장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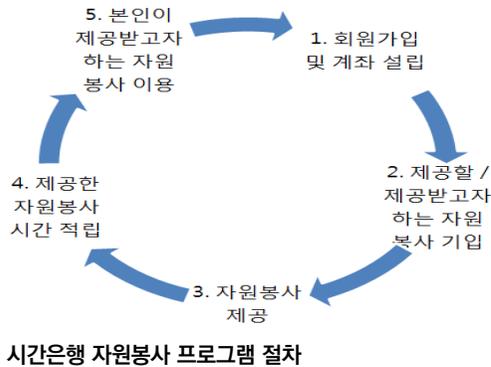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4/04/DATA/20o4s200.pdf>

사회·복지

시간은행(Time Banking) 자원봉사제도 확대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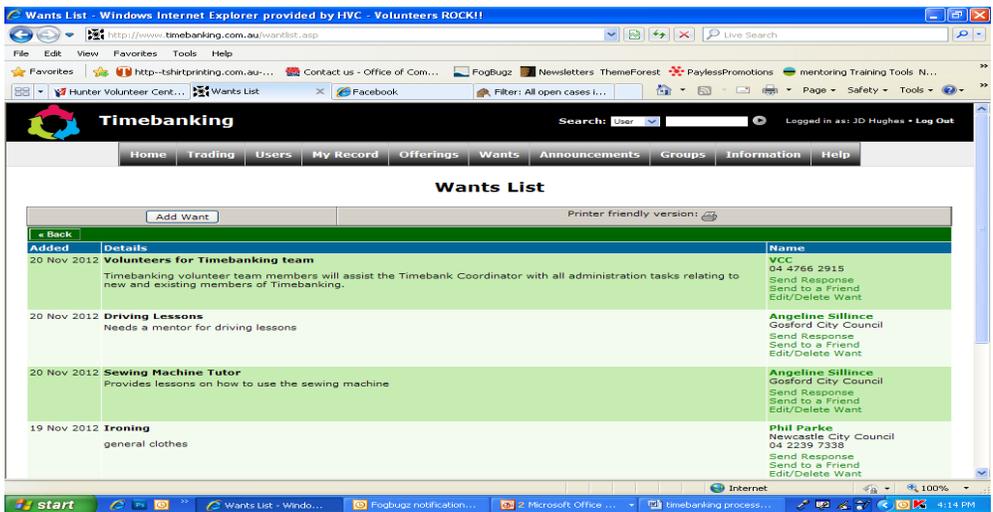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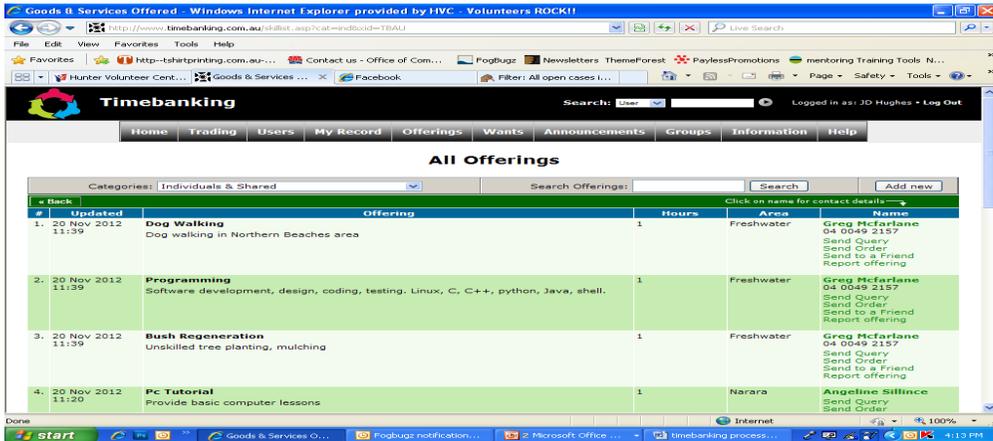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사회·복지

-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 시민지역사회부(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Communities)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에 걸쳐 시간은행 개념에 기반한 혁신적인 자원봉사 시범사업을 실시했음. 시범사업이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시민지역사회부는 2014년 6월부터 주 전역에 걸쳐 약 30여 개 지역에 시간은행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함.
- 시간은행(Time Bank)은 자원봉사 교환 프로그램으로서, 돈이 아닌 시간을 교환단위로 기술이나 자원을 거래하고 교환할 수 있는 방식임. 예를 들어, 어느 참가자가 1시간의 자원봉사를 제공하면 이는 크레딧(credit)으로 적립됨. 본인이 적립한 크레딧을 이용하여 필요한 봉사 서비스를 받게 되면 마치 은행 계좌의 출금처럼 크레딧이 차감됨. 교환되는 자원봉사는 그 금전적 혹은 기술적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시간적 가치로만 계산됨.



- 시간은행 참가는 시간은행 운영자(www.timebanking.com.au)를 통한 회원가입과 개인 계좌 설립으로 시작됨.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회원 개인의 홈페이지가 개설되며, 여기에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봉사 서비스와 제공받고자 하

는 봉사 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게 됨. 그리고 다른 회원들의 목록에 기초하여 상호 욕구가 맞는 회원에게 연락하여 자원봉사를 거래함. 서비스 제공이 완료 되면 투여된 시간만큼 자신의 계좌에 크레딧이 적립되고, 적립된 크레딧을 활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봉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하나의 활동이 종료될 때 마다 결산 대조표가 갱신됨.



시간은행 홈페이지 모습(상: 제공할 서비스 목록, 하: 원하는 서비스 목록)

Statement of Account for JD Hughes
This Month

#	Date	Account No - Name	Description	Credit	Debit	Balance (Hr)
1	18 Nov 2012	TBAU00013 - Hunter Wetlands Centre	Tree planting for Timebanking	2.00		2.00
Total (for the period):				2.00	0.00	0.00
Carried forward:				2.00	0.00	2.00

시간은행 홈페이지에서 결산 대조표

- 헌터(Hunter), 센트럴 코스트(Central Coast), 뉴카슬(Newcastle), 그리고 레이크 매쿼리(Lake Macquarie) 등 4개 지역에서 행해진 시범사업에 약 4,300명의 주민이 시간은행에 가입했으며, 10,300 이상의 시간이 교환되었음.
 - 시간은행은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으로서 그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됨. 통상적인 자원봉사와 달리 시간은행은 자원봉사의 호혜성(reciprocity)으로 인해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큼. 시간은행은 공동체 내의 나눔과 교환을 촉진하여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증진시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실제 시범사업에 참가한 주민들은 시간은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함.
 - 시간은행은 또한 참가자의 자기계발의 계기가 되었고, 실제 많은 참가자들은 시간은행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지역사회의 고용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간은행 시범사업 평가 결과는 아래 링크(<http://www.volunteering.nsw.gov.au/documents/23672909/23725145/Evaluation%20of%20the%20NSW%20Volunteering%20Strategy%20Final%20Report%20Timebanking%20Trial%20-%202014.pdf>)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음.

- 시간은행은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자원봉사 전략”(NSW Volunteering Strategy)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음(http://www.volunteering.nsw.gov.au/documents/23672909/23725145/Volunteer%20Strategy%202012_Final.pdf).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시간은행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부가 프로그램 도입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왔다는 점에서 비정부기관이 주관이 되어 소규모로 자발적으로 행해져 온 다른 나라의 사례와는 구별됨.
 - 즉, 시간은행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시민지역사회부는 이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를 설계하고 제공했으며, 지원체계 및 이용자 매뉴얼 개발, 참가자 모집 그리고 지역사회 확산을 주도했음. 정부의 책임성으로 인해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시간은행은 더욱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http://www.nsw.gov.au/news/innovative-timebanking-program-takes>

행재정·교육

친환경 학교 교육 지원사업 확대 시행

호주 빅토리아주 / 행재정·교육

- 빅토리아(Victoria)주는 지난 2011년부터 주정부 환경부(Sustainability Victoria)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의 공동 프로젝트로 학교의 친환경 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음. “현명한 자원 사용을 위한 친환경 학교 프로그램”(ResourceSmart AuSSI(Australian Sustainable Schools Initiative))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학교의 친환경 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해 왔음

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와 물 소비를 줄이며, 생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친환경 학교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직접적인 활동은 대략 250여 가지에 이르며, 이에
는 학교에 텃밭 설치, 씨앗 제공, 재활용 유기농 퇴비 지원에서부터 빗물 저장 탱크와
태양광 패널 등 에너지 효율적인 친환경 시설 설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또한, 본 프
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교사 훈련 및 세미나, 그리고 친환경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재
등의 간접 활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아울러, 각 지역별로 학교의 활동을 지원할 전
문가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학교에 자문 등을 제공함.
 - 최근 친환경 학교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에 의하면, 참여 학교들은 평균 22%의
에너지 절감과 29%의 물 소비 절약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주정부는 앞으로 참여 학교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
 - 현재까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 및 중·고등학교는 1,000여 개에
달하며, 2014년부터는 미참여 학교의 참여를 독려함과 동시에 기존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치원까지 포괄할 계획임. 이는 유년기 학생들에게
친환경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더 이른 생애 주기에 환경친화적인 생활 습관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본 프로그램에 신규로 가입하는 학교에게는 1만 호주달러(약 960만원)의 인
센티브가 제공됨.
- 친환경 학교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활동은 크게 핵심(core), 생태다양성(biodiversity),
에너지 소비, 쓰레기 관리 그리고 물 소비 등 5가지로 구성됨. 일단 프로그램에 가입하
게 되면 '핵심' 모듈 활동이 적용되며, 이에 해당 학교의 친환경 교육 현주소 점검, 프
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준비 작업, 그리고 향후 실행 계획 마련 등이 포함됨. 핵심 모듈
은 참여 학교가 첫 해부터 우선적으로 완료해야 하는 활동이며, 나머지 모듈들은 특정
한 순서없이 기한 내에 추진하면 됨.

친환경 학교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활동

모듈	내용	최소 활동 규정
핵심	현재 학교의 친환경 교육 실태 및 계획	24 (총 24개 활동)
생태 다양성	교내, 학교 주변, 지역 생태계, 그리고 식물 및 동물 서식지 보호 및 개선 활동	34 (총 48개 활동)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향상,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대기 질 향상 활동	26 (총 65개 활동)
쓰레기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매립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쓰레기 배출 관리 활동	47 (총 63개 활동)
물	교내에서 물 소비를 줄이고, 강이나 해안 등 지역사회 수자원 보호 및 개선 활동	32 (총 57개 활동)

- 친환경 학교 프로그램은 3년 주기로 지원되며, 이후 진행상황과 수행 실적에 기초하여 갱신 여부가 결정됨.
 - 평가 작업은 친환경 활동 추적 시스템(School Environment Tracking System)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매 6개월마다 참여 학교들은 에너지 고지서, 수도 고지서, 종이 및 물 사용 데이터, 그리고 기타 친환경 교육 활동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 각 모듈은 최소한 수행해야 할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지원이 중단됨. 반면,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교들(winners)과 모든 활동을 이수한 학교들(finalists)은 모범사례로 선정됨과 동시에 현금 보너스(ResourceSmart Schools Awards)를 받게됨.
- 빅토리아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다음 단계의 친환경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총 8백 3십만 호주달러(약 8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2014년 말까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친환경 학교 활동 평가가 이루어지며, 동시에 유치원들에 대한 시범사업이 마무리됨. 이에 기초하여 2015년부터 다시 다음 3년간의 프로그램이 재개될 계획임.

<http://www.premier.vic.gov.au/media-centre/media-releases/9589-sustainability-seeds-planted-in-kinderg.html>

신임 뮌헨시장 취임사

독일 뮌헨市 / 행정정·교육

- 2014년 3월 16일의 바이에른州 지방선거에서 뮌헨 시장으로 당선된 디터 라이터(Dieter Reiter)는 5월 2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하였음. 라이터 시장은 이날 발표한 취임사를 통해 뮌헨을 학문과 문화의 도시로 이끌어 온 전임 시장들의 업적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향후 시정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혔음.
- 취임사에서 앞으로의 뮌헨 도시 정책은 주민의 복리를 중심으로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함께 이룩하는 데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11가지 항목의 시정 운영 기조와 더불어 10가지 세부 분야에 있어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라이터 시장의 뮌헨 시정 운영의 기조는 다음과 같음.
 - 출생과 출신에 관계 없이 세계인 누구에게나 개방된 도시
 - 약자에게 사회적 배려를 베풀고 약자와 연대하는 도시
 -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충분한 임금을 받는 정규직 일자리가 있으며, 직업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도 실질적으로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
 - 주민들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도시
 - 질 높은 보건 서비스가 보장되고, 시립 병원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 노년층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충분한 주거가 제공되는 도시
 - 유아가 우선권을 갖고,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는 도시
 -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크고 작은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도시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적인 협력을 이끌어 나가되, 유럽 내의 다른 대도시

와 유럽연합의 가치를 띤 공통의 목표 달성을 추구하고, 인근 지역들과 더불어
공동의 주거지와 산업단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

- 다양한 기업이 소재하는 번영하는 경제 중심지이자 학문의 중심지로서 세계적 위상을 유지하는 도시
 - 성숙한 민주 시민의 도시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시민 운동이 발달하고, 극우파가 발 붙일 곳이 없는 도시
- 위와 같은 기초 하에, 각각의 시정 분야에 있어 자신의 임기 동안 추구할 구체적인 정책 주안점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연대의 도시로서 사회적 평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배려는 어디에나 필요한 것이며, 특히 기본적인 사회 배려의 보장은 본 시장 임기에서 중요한 원칙에 속함.
 - 급부행정(給付行政)을 통해 노인과 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질 것임.
- 주거 확충과 임차인 보호
- 전임 우데(Ude) 시장의 임기 동안 125,000호 이상의 주택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주거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는 뮌헨 주택시장에도 미쳤으며, 따라서 市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이념적, 실질적 장애를 걷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연방 정부에 임차인의 생활 보호를 위한 지원을 촉구할 것임. 그리고, 시립 주택의 추가 공급을 위해 市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임.
 - 임차인의 안정을 위한 계획으로서 “뮌헨 모델”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될

것이며, 조합식 주택건설을 위한 지원도 계속될 것임.

- 대중교통 정책

- 백만 이상의 대도시의 교통 문제는 복잡한 과제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명확한 것은 70년대식의 교통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임.
- 도시 주변 지역에서의 교통 유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자가 교통수단을 대체할 대중 근거리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자전거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함.
- 기존의 자가용 승용차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도로 체계와 신호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며, 터널 건설 역시 가능한 대안임.
- 신 교통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규 대중교통 노선의 마련이며, 이를 위해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하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 내고, 신규 S-Bahn(광역철도) 및 U-Bahn(도시철도) 노선의 확충을 추진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 Pasing 및 Freiham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5호선의 연장과 도심지의 신규 도시철도망인 도시철도 9호선의 건설을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규 도시철도 노선과 터널 건설을 위한 연방정부 및 바이에른 주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 유아 교육 분야

- 뮌헨시는 모든 유아가 기회의 평등을 가져야 한다는 목표 아래, 유아 교육 분야에 대해 독일 내 다른 도시들 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 왔음.
- 뮌헨시 예산 항목 중 가장 큰 분야로서 연간 10억 유로(약 1조 4,179억 원) 이상을 유아 교육과 스포츠 시설 마련에 투입해 왔으며, 지난 5년 동안 3세 이하

유아 중 50% 이상을 보육 시설에 수용할 수 있었고, 약 90%의 유아를 유치원에 수용할 수 있었음.

- 2017년까지 10,000명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며, 늘어나는 유아 보육 수요에 맞추어 모든 유아가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편안한 교육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 교육 시설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위한 행정 업무 역시 확대할 예정임.

- 지방자치 차원의 급부행정과 지방공기업 운영

- 뮌헨시는 지금까지 바이에른주 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달리 급부행정 영역에서의 공기업 매각을 하지 않았으며, 본 시장의 임기 동안에도 급부행정의 민영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 이는 특히 시립 병원의 운영에 있어 강하게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보건 행정에 있어 높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뮌헨 도시공사의 운영에 있어서도 뮌헨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전력할 것임.

- 질 좋은 일자리의 마련과 경제 번영

- 뮌헨은 좋은 경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뮌헨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본 시장의 목표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갖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과 조합, 상공회의소 및 산업위원회와 시가 협력해야 하며, 시는 뮌헨 소재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임.
- 제조업과 수공업, 호텔업, 에너지공급업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시 전역에서의 무선 인터넷 연결, 현대식 교통신호시스템 마련, 공공 정보관 개설, 자동화된 운송시스템 마련, 전자정부 운영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

- 이러한 단계를 거쳐 'Smart City' 뮌헨이 탄생될 것이며, 이는 경제와 교육 중심지로서의 뮌헨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임.

- 환경 및 에너지 정책

- 뮌헨市는 2025년까지 전역의 전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목표를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들을 시행하고 있음.
- 수력, 지열, 태양열 및 바이오매스(biomass) 외에도 이 프로젝트의 중심 과제로 풍력발전소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 2025년까지 약 90억 유로(약 12조 7,614억 원)를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2040년에는 독일 최초로 도시 전역의 난방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원으로 한 원격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 완료될 예정임.

- 재정 건전성의 확보

- 2005년 이후 뮌헨市는 신용대출을 받지 않고 있으며, 채무액은 2005년의 34억 유로(약 4조 8,210억 원)에서 2013년에는 25억 유로(약 3조 5,448억 원)로 줄어들었음.
- 이는 198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본 시장의 임기에도 장래의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이러한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해 나갈 것임.

- 문화정책

- 뮌헨은 유럽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다양한 문화 행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뮌헨市는 향후 시립 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미 설계와 부지 확보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
- 또한 연주회를 비롯하여 예술 전 영역의 이벤트를 위한 공간을 더욱 늘릴 예정

이며, 주민 극장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여 모든 자치구가 각자의 극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예술 분야에의 투자를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할 것이며, 이는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 뮌헨市는 시민의 결정을 통해 발전되어 온 도시로, 본 시장 역시 모든 결정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할 것임.
- 도시계획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될 것이며, 시민제안 제도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주민참여 제도를 시행할 것임.
- 정책 결정 단계에 주민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정책의 신뢰성은 높아질 것이며, 공동체 내의 정치 문화의 고양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뮌헨의 민주주의는 극우파와 인종차별을 배격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난관 끝에 탄생한 나치 문서보관소(NS-Dokumentationszentrum)는 큰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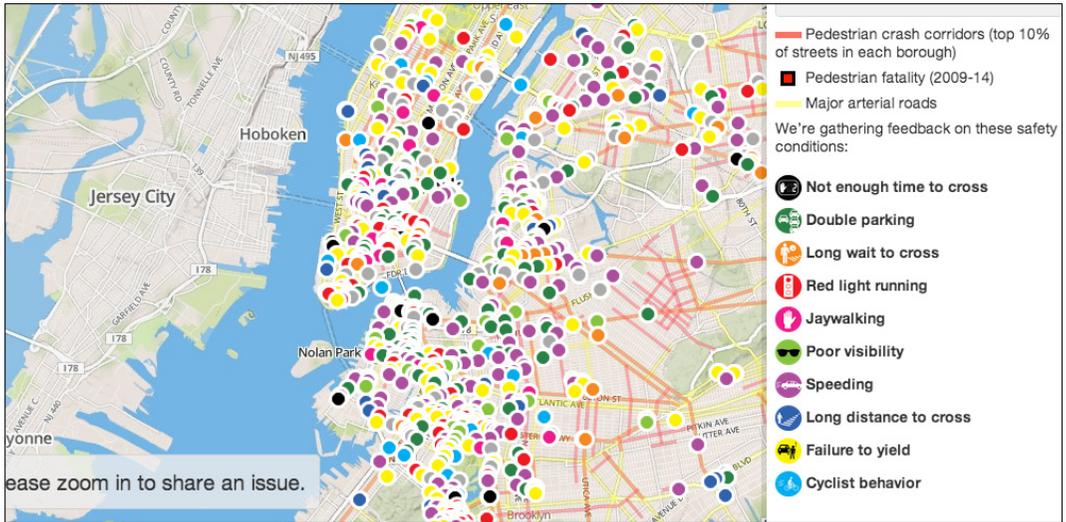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finfos/Presse-Service/0205-Antrittsrede von OB Reiter.html>

환경·안전

도시의 안전문제 논의 공간, 인터넷 커뮤니티 오픈

뉴욕市 / 환경·안전

- 뉴욕市는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시장 취임과 함께 교통안전 사고 제로를 위한 'Zero Vision'을 발표하였는데, 최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새로운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발함. 이 인터넷 공간은 시민들의 신고와 의견제시 등을 통해 주위에서 발견되는 위험과 불편 상황 등을 시공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지역별 담당자들이 이러한 시민의 의견을 새로운 시설 및 정책 도입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줌.
- 이 대화형의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의견을 함께 올려 관련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제공된 정보들은 각 자치구에서 보다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에 사용될 예정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몇 가지 신고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 Lower Manhattan 지역의 사례 : Church Street지역에서 접근하는 차량들이 보행자들에게 양보를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또 끼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Union Turnpike in Queens : 차량들이 지정 속도 이상으로 고속 주행하고 있으며, 보행자들을 위한 보도는 열악한 상태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로 이러한 불편사항이나 잠재된 교통사고 위험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됨.



지역별로 위험지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위험이나 불편상황 등을 신고할 수 있음

<http://visionzero.herokuapp.com/page/about>

<http://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4/04/new-map-gives-new-yorkers-power-report-traffic-hazards/9004/>

도시계획·주택

표준화된 개발 부담금 제도 도입

호주 빅토리아주 / 도시계획·주택

- 빅토리아(Victoria)주는 2012년부터 개발 부담금 제도(Development Contribution Plan)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음. 광범한 자문과 논의를 거쳐 2014년 5월에 새로운 기본 틀을 채택하고, 개발 부담금 표준화와 ‘기반시설 상임 자문위원회’ (Infrastructure Standing Advisory Committee)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Infrastructure Contribution Plan)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현행 개발 부담금 제도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는 「개발 및 환경법 1987(Planning and Environment 1987)」

이 새로운 개혁안을 반영하여 개정되었고,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는 새로운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 개발 부담금이란 신규 개발 및 재개발 시에 개발자가 지방정부(구청)에 부담하는 일종의 기여금임. 도시 개발 또는 재개발은 통상 도로나 상하수도 등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 및 기존의 노후된 기반시설 개량 혹은 대체를 유발하며, 개발 부담금은 이러한 기반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됨. 개발 부담금은 개발 허가를 위한 사전 조건으로서 부과되어 왔음. 현행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개발 승인 과정에서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고, 이로 인한 개발 지연 그리고 개발자와 지방정부 간의 분쟁 등 각종 비효율을 초래하여 재검토가 요구되어 왔음.
 - 개발 계획 및 개발 부담금 추산은 개발자의 책임이었으며, 개발자는 실제 개발 계획보다 개발 부담금 산정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 및 시간을 투입해야 했음. 많은 경우 개발 부담금 계획을 준비하는 데에만 2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개발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관련 기반시설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았음.
 - 표준화된 개발 부담금 산정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개발자는 추산된 개발 부담금에 대한 정당화 혹은 재정당화(지방정부의 미승인시)에 관여해야 했으며, 한번 확립된 개발 부담금은 개발 과정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유연성을 초래하기도 함. 토지 가격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데, 추후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의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즉, 승인 과정에서 산정된 개발 부담금과 실제 소요되는 비용 간의 격차로 인해 개발 부담금 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될 위험을 안고 있었음.
 - 또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개발에 대해 지방 정부 간에 다른 부과금이 적용되는 비일관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관료들의 재량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감사부(Auditor-General)로부터 책임성(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에 관한 지적 대상이 되어 왔음.
- 개발 부담금 제도는 지역사회 센터, 스포츠 시설, 도로 및 공원 등 도시 개발에 중요한 역할

을 하기 때문에 주정부는 현행 제도를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관료주의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함. 새로운 개발 부담금 제도는 우선 도시 주요 개발 지역(priority growth locations)을 크게 '전략적 개발 지역(Strategic Development Areas)'과 '미개발 성장 지역(Greenfield Growth Areas)'으로 구분하고, 이 지역 구분에 따라 표준화된 부담금을 적용함. 전자는 대중교통과 기존 기반시설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대규모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산업 지대 혹은 교통 등의 입지가 좋으나 활용도가 낮았던 상업 지대 등 향후 주거 및 고용 성장의 대부분이 발생할 지역임. 후자는 부차적으로 향후 도시 기능이 확산될 지역(Urban Growth Zone)으로 선정된 지역임. 전략적 개발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이 부과되며, 주거지 개발은 제공되는 총 주택(dwelling)의 수에 따라 그리고 비주거지 개발은 연면적(gross floor area) 혹은 개발 지역 면적(net development hectar)에 기초하여 부담금이 결정됨.

지역별 표준 개발 부담금율

지역 구분	위치	개발목적	
		주거지	비주거지(연면적 당)
전략적 개발 지역	도심	4,500달러 (주택 당)	- 소매지대: 46달러(연면적 당) - 산업지대: 16달러(연면적 당)
	외곽	3,600달러 (주택 당)	- 소매지대: 36달러(연면적 당) - 산업지대: 13달러(연면적 당)
미개발 성장 지역	도심	268,000달러 (헥타르 당)	- 소매: 161,000달러(헥타르 당) - 산업지대: 80,000달러(헥타르 당)
	외곽	210,000달러 (헥타르 당)	- 소매지대: 126,000달러(헥타르 당) - 산업지대: 63,000달러 (헥타르 당)

- 새로운 기반시설 기여금 제도는 개발자로부터 징수한 개발금의 사용처를 명시하고 있음. 기반시설은 다시 '필수(basic and essential)' 기반시설과 '추가(high order)' 기반시설로 분류되며, 필수 시설에는 복지관이나 보육시설 등의 지역 사회 센터, 스포츠 시설, 그리고 주차장이나 공원 등의 개방 공간(open space) 시설이 포함되며, 추가시설에는 실내 체육관이나 예술 및 문화센터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재)개발 사업에 추가 기반시설 건설이 요구될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Supplementary Levy)이 부과될 수 있음.
- 새로운 기여금 제도는 기반시설 상임 자문위원회 설립을 포함하고 있는데, 위

위원회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및 정착에 필요한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개발 기여금 제도 및 도시 개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개발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새로운 제도 운영을 관리하고 검토하게 됨. 표준 기여금율은 물가지수에 연동하여 단위 비용을 반영하게 되며, 매년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갱신됨.

- 새로운 기반시설 제도는 기존에 비해 훨씬 공정하고 간소한(streamlined)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음. 부담금에 대한 추산과 정당화 과정이 제거됨으로써 개발자와 개발승인자 간의 복잡한 협상 과정이 최소화되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여금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됨. 개발자들은 사전에 표준 기여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성이 증가되며, 무엇보다도 기반시설이 신속히 제공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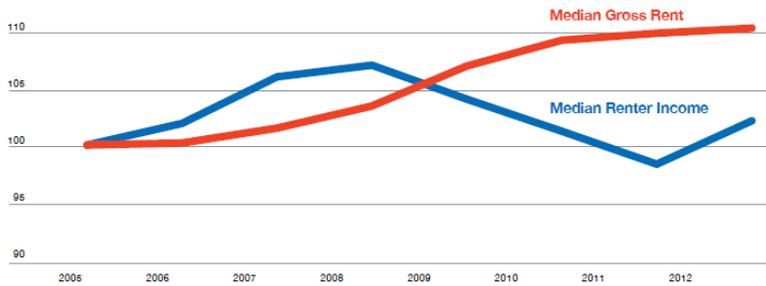
<http://www.dpcd.vic.gov.au/planning/theplanningsystem/improving-the-system/development-contributions-reform>

저렴주택 공급 전략계획, “Housing New York” 발표

뉴욕市 / 도시계획·주택

- 뉴욕市는 지난 20여 년간 주택 임대료가 40% 이상 상승하였고, 2005~2012년 사이에도 11% 이상 상승하였음. 이에 반해 최근 몇 년 사이 소득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임대료 상승과 더불어 특히 뉴욕市的 저소득층을 위한 낮은 임대료의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뉴욕市는 최근 5개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불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일반 시민에게 공급하는 전략계획, “Housing New York”을 수립하여 발표함.
- 월세형 임대유형이 자리잡고 있는 뉴욕市에서는 높은 임대료 부담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침. 2012년도 기준으로 세입자의 55% 이상이 월소득의 30% 이상을,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소득의 5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Index of New York City Median Gross Rent and Renter Household Income, 2005 - 2012



소득 중간값과 임대료 중간값 비교 그래프

- 이러한 상황은 임대료가 저렴하면서 양호한 주택에 대한 수급 불균형에서 초래된 결과로, 실제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유형의 주택은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이에 뉴욕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시민들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저렴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시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의 창출과 임대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장 형성이 도시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함.
- “Housing New York”은 10년 전략계획으로 뉴욕시 13개 실국과 200여 개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수립된 계획임. 이 계획은 200,000세대 이상, 50만명 이상의 수혜자(거주자)를 목표로 50개의 상세한 계획으로 구성됨. 이 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모든 뉴욕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 주택의 건설
 - 기존 주택의 주거수준과 지불가능성을 확보할 것
 - 노숙자,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할 것
 - 본 사업을 위한 예산의 출처 조정과 예산 시행 방법과 절차를 재정비할 것

- 뉴욕시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이 계획을 수립함.
 - ① 주택정책은 반드시 현재의 인구변화와 시민들의 지출 규모나 유형을 고려하여 수립할 것, ② 토지이용정책과 계획절차를 개편할 것, ③ 도시 공간 내에 미래의 새로운 주택정책에 대한 수용 능력을 고려하고, 리조닝(Rezoning)에도 대비하도록 할 것, ④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는 없애고, 기존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을 재정비할 것, ⑤ 지속적인 도시 변화에도 저렴한 임대료의 주거지는 전략적으로 보호할 것, ⑥ 세입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임대규제정책을 펼칠 것, ⑦ 주거지로 선호하는 지역을 잘 활용할 것, ⑧ 주택정책을 위한 자본 투자를 늘릴 것 등임.

- 이번 계획에는 각 지역별로 계획 내용에 부합하는 주거지 확보 방법 모색, 주택정책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향후 도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려, 추가적인 주택 건설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와 이를 위한 투자 증진 방법, 간단하면서도 유연성 있는 인센티브제도 개발, 새로운 프로그램(기존의 주택지를 노인용 주거지로 변화시키거나 지역적인 요구에 맞도록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 등)에 대한 시범 사업 시행, 저소득층의 주택 수요에 대한 양적인 공급책 모색, 지역별로 다른 주거지 유형과 거주자 유형(독신, 가족, 노인 등)에 대한 필요 반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012년도 뉴욕시 주거 유형 및 세대별 거주자 수 데이터

- 이번 계획에서는 5개 區에 각각 사례지를 선정하여 현재 필요에 맞는 저렴한 주택 개발, 재개발, 리노베이션 등의 형태로 각각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수록함. 각 커뮤니티는 이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다양한 계획기법과 저렴한주택 확보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사례지별 주택공급 구상도

<http://www.nyc.gov/html/housing/pages/home/index.shtml>

참여형 공동주택 사업 공모

파리市 / 도시계획·주택

- 파리市는 2014년 4월 30일부터 3개 동의 시영 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자 공모

에 나섰음. 각 동은 5~13가구로 구성되는데 파리 19區의 Armand-Carrel街와 20區의 Gasnier-Guy街의 택지에 건설될 예정임.

- 참여형 공동주택은 북유럽국가에서 매우 발전한 주택형태인데 프랑스에서는 오래동안 신뢰성 문제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음. 이에 파리는 직접 참여형 주택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 공모에 나선 것임. 파리는 건설 및 입주의 매 단계별로 사회적 주택공사와 함께 입주자들에게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임.
 - 참여형 공동주택은 한 건물이나 같은 단지 내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할 목적으로 지어진 주택으로서, 참여 세대의 주민들이 건물 설계부터 건축과 관리 비용까지 모두 함께 부담하게 되고 주민들이 설립자나 회원으로 가입된 주식회사에 의해 집합적으로 운영됨. 주민들은 재정적 운영뿐 아니라, 출신 계층이나 민족적 생활방식, 혹은 공통의 친환경 신념 등 비슷한 가치 등에 기반해서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 공동생활원칙에 따라 생활하게 됨.
 - 파리는 이번 공모에 지원한 사업들을 파리 시의원과 주거 담당 공무원, 그리고 참여형 공동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임. 공모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혁신점 등을 담아 기획되어야 하며, 건물들은 에너지 고효율성과 함께, 공동 생활공간과 주택 내의 계층/연령 혼합성(입주세대 일부는 사회적 주택)을 보장해야 함. 참여형 공동주택에서 면적의 최대 20%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업, 문화, 공방, 단체 등의 근린시설로 계획되어야 함.
- 사업공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를 거쳐 진행됨.
 - 공모 1단계(생활계획) : 6월 6일까지 개인별로 신청하여 6차례의 참여형 공동주택 설명회에 참석하게 됨. 이 기간에 신청자들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다른 신청자들과 그룹을 결성하고, 공동주택 계획 구상법을 배우게 됨. 10월까지 월 2차례로 설명회가 진행되고, 2014년 11월까지 택지 별로 4개 집단, 총 12개 그룹을 후보로 선택함.
 - 공모 2단계(주택계획) : 후보로 선정된 집단에서는 이어서, 조합을 결성해서

도청에 등록하고, 시청에서 연계하는 전문가들과 상의하면서 주거계획의 핵심 요소를 정의해서, 그 법적인 위상과 주거 모델의 상세한 실현계획안을 제출하게 됨. 택지별로 4개 조합 가운데 2개 조합을 선택하여 총 6개 조합을 2015년 6월까지 선정할 예정임.

- 공모 3단계(건축계획) : 제출된 주택 모형에 기반해서 최종안이 선정되고, 市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게 됨.

http://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l-habitat-participatif-a-paris-c-est-parti/rub_1_actu_143205_port_24329

<http://www.habitatparticipatif-paris.fr/appele-a-projet/deroulement>